

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신설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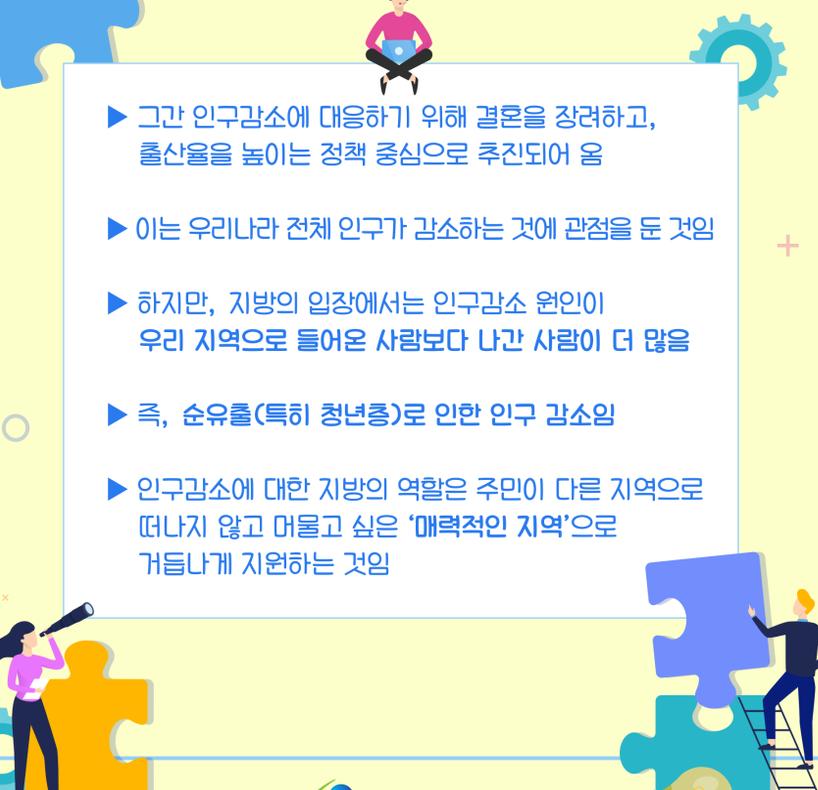
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



- ✓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2021. 6. 1. 제정) 제30조와 동법 「시행령」(2022. 12. 27. 제정) 제15조를 근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'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' 설치
- ✓ 122곳(감소지역 89곳, 관심지역 18곳, 광역시도 15곳) 인구감소지역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인구감소대응 패러다임 전환



- ▶ 그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,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
- ▶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관점을 둔 것임
- ▶ 하지만, 지방의 입장에서는 인구감소 원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음
- ▶ 즉, 순유출(특히 청년층)로 인한 인구 감소임
- ▶ 인구감소에 대한 지방의 역할은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'매력적인 지역'으로 거듭나게 지원하는 것임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인구감소대응 지자체 사례



- ✓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함양군 서화초등학교 사례
 - 사례 함양군 서화초등학교
 - '농촌 유토피아' 정책으로 시행된 사업 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 - 폐교 위기에 있던 '서화초등학교' 소생을 위한 프로젝트
 - 지자체, N공사, 에디스모터스가 협력하여 서화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과 부모에게 주거 공간과 일자리 제공
- ✓ (중앙정부의 신규 지원) 인구감소지역 대상 은퇴자·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부처가 협약을 맺어 2023년 7개 기초지자체에 '지역활력타운' 시범 추진, 내년에는 확대 예정
 - *5개 부처 (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중소벤처기업부)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지역주도,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전략



대도시 중소도시

- ✓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함
- ✓ 대도시는 기존 결혼 장려나 출산을 향상 등 인구사회적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고,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일자리, 주거, 교육, 육아, 문화 등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종합적 처방에 방점을 두어야 함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향후 추진계획



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
- ▶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지원(컨설팅 포함)
- ▶ 인구감소 지수 모니터링, 인구감소대응 관련 연구 등

이재연 기획조정실장 | 033-769-9860 | leeje@krila.re.kr